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바뀌도 불법체류자 양산 여전

체류기간 10년으로 늘렸지만

‘사업장변경제한’ 그대로

좋은 일자리 찾아 무단이탈 우려

전남 계절근로자 이탈률도 급증

불법체류 줄일 제도 재정비 필요

고령화가 지속되고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 방지와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연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봤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에 관광을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다 연락이 두절된 태국인 23명도 국내취업을 위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탈한 태국인들이 입국 이후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재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체류기간이 짧아보니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에 익숙해질 때날 수 밖에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일을 더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해 불법체류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체류기간만 늘렸을 뿐 불법체류자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사업장변경제한’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30% 이상을 체불을 2회 이상 당했을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갑질이나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이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직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41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월에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던 4명의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가 중요하지만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도 2017년 약 1.7%(1085명 중 18명 이탈)에서 2022년 7.9%(8091명 중 640명 이탈)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는 이유는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 불법 체류가 되더라도 제조업체 등 공장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사업주도 4대 보험 등을 주지 않아도 돼 이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 지역 노동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제한돼 불법체류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연한 권리를 이지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자켓 5000원·바지 2000원...교복 나눔장터 학부모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8일 광주시 북구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설교복 나눔장터에서 교복을 구입하고 있다. 연중 운영되는 나눔장터에서는 자켓을 5000원, 바지·셔츠·조끼를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재)광주북구장학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정보호 세워 배수 작업...인양후 실종자 수색

오늘 새벽 목포항 도착할 듯

전북사고 닷새만에 ‘정보호’ 선체가 바로 섰다. 인양 준비작업이 대부분 끝나면서 정보호 선내에서 나머지 실종자 모두가 발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해경은 8일 신안군 소허사도 동쪽 해상에서 진행 중이던 뒤집힌 정보호를 똑바로 세우는 인양 준비작업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오후 7시께 바로 선 전체를 들어 올려 배안에 찬 바닷물을 빼는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수 완료에는 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정보호는 사고 5일만에 해상 위로 끌어 올려지는 ‘인양’이 진행된다.

해경은 인양이 되는 대로 수색구조팀과 수사팀을 선내로 들여보내 남은 실종선원 4명을 찾기 위한 1차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해경은 인문 브리핑에서 선내 수중 수색으로 선체 대부분의 내부 공간을 3차례 살폈지만, 화물칸은 각층어구와 물건들이 뒤엉켜 확

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양후 1차 수색에서 정보호 화물칸 수색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정보호는 인양업체의 판단에 따라 바지선에 올리거나, 바다 위에 띄운 상태로 끌고 오는 방식으로 목포 소재 조선소로 향하게 된다.

목포 항구까지 약 7~8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9일 새벽께 도착할 전망이다.

조선소에 도착한 정보호가 안정화되면, 선체 내부를 최종 수색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해상에서는 선내 장애물 제거가 어려워 육지에서 수색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해경은 해상에 실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사고해역 주변으로 수색구간을 반경 5.5km까지 확대하며 일대 해상도 함께 수색하고 있다.

한편 해경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목포 신안군수함에 마련된 기족 대기실에서 “해경이 아직 화물칸 쪽을 수색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저희는 배에 남아있지만을 비탈 뿐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전국 돌며 마약 구매해 투약한 50대 징역형

전국을 돌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8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순천을 비롯 서울·부산·평택 등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86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승용차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준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5차례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서 전동보행기로 길 건너던

80대 할머니 차에 치여 숨져

보성에서 전동 보행 보조기를 타고 길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보성군 특랑면 예당리의 한 도로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길을 건너던 A(여·80)씨가 SUV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유연재 기자 yjyou@

## 정보호 선원 장례비·보상금 보험서 지급

전북된 정보호에서 발견된 선원들에 대한 장례가 치뤄지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의 장례비나 보상금 등은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8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정보호 전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선원 5명 가운데 4명의 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했다.

유가족들은 순천, 통영 등 각자 거주지역이나 목포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고 있다.

장례비나 보험금 등은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안군 측

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없다. 책임 주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재해나 재난 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관할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대책 본부를 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어선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병원비와 장례비의 경우 보험사와 선주, 실종자 가족을 연결해 면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